



[푸드테크 시리즈]
HMR로 저녁 먹고
새벽배송으로 장 보고
달라진 식탁
04



Economy

코스피	2064.17	(-46.42)	코스닥	668.72	(-25.45)
금리 (국고채 3년)	1.42	(0.00)	환율 (원/달러)	1182.00	(+11.60)(8일)

“반도체 소재 확보” 日찾은 JY, ‘3國 우회수입’ 등 강구

(이재용 삼성 부회장)

첫 행보로 日소재업체 임원 만나
해외공장 통한 배송 방안 논의
간접 지원, 추가규제 가능성 등
전문가·원로들에 조언 구할 듯

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
장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
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
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. 이 부회장은
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
출 규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
일본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부회장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에
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‘일본통’이
다.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이어온 일본
계와 원로 인맥도 이 부회장의 우군
이다.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의 친
분은 이미 유명하다.

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
첫번째 행보로 한 일본 소재업체 임
원을 만났다. 일본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
물량을 배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
는 전언이다. 대만과 싱가포르에 생산
거점을 보유한 소재 업체 스타라가 유
력하다.

이 부회장은 이어 일본 유력 인사들
을 만나 다양한 간접 지원 가능성을 타
진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
알려졌다. 또 이 부회장은 현지 전문가

와 원로들에 추가 규제 가능성과 대상
품목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있는
것으로 재계는 예상했다.

수출 규제 조치 대상 기업을 직접 만
날 수도 있다. 현지 업체도 삼성전자 매
출이 적지 않은 만큼, 경제적인 차원에서
협력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얘
기다.

단, 이 부회장이 무리하게 움직이기
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. 일
본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강수를
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애기치 않은
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다.

이 부회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만
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같은 이유
에서 나온다.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원
인이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한 만큼, 직
접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.

귀국 일정도 미지수다. 오는 10일 문
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
담회를 준비한다고 전해졌지만, 상황
이 급박한 만큼 체류 기간이 더 길어질
수도 있다.

한편, 일각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
장도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행을 결정
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. 일단은 사
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, 최 회장
도 도시바 메모리 인수전 당시 두터운
인맥을 구축했던 만큼, ‘민간 외교관’
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
알려졌다. /김재용 기자 juk@metroseoul.co.kr



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회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.

/뉴시스

“日 수출규제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 촉구”

文 대통령, 수보회사 첫 공식언급
“日, 자유무역 원칙으로 돌아가길”
홍남기 부총리, 대외경제장관회의
“日규제, 세계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”

문재인 정부가 ‘일본 정부의 우리나
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’와 관련, 경제보
복 철회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.

앞서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
업체가 ▲플루오린 폴리미드·▲리지
스트·▲에칭가스(고순도불화수소) 등
반도체·디스플레이(브라운관 등을 통
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) 소
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
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
했다. <관련기사 2·3면>

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
강화한 이유는 ▲우리 대법원의 ‘강제
징용 배상 판결’과 ▲‘WTO(국제무역
기구) 수산물 분쟁’ 등과 연관이 깊다.
즉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
의 보복조치인 셈이다.

정부가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경제
보복 철회에 집중하고 있음은 문재인
대통령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.

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
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“정부는 외교적
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”며
“일본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 있는
협의를 촉구한다. ‘무역은 공동번영의
도구여야 한다’는 국제사회의 믿음과
일본이 늘 주창한 ‘자유무역 원칙’으로
되돌아가길 바란다”고 했다. 이어 “정
부는 기업과 함께, 기업 피해를 최소화
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
마련하겠다”며 “한편으로 중장기적 안
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경제의
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
다”고 부연했다.


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홍남기
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
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
장관회의 때 “일본의 수출규제는 철회
돼야 한다”며 “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
무역기구(WTO) 협정에 배치되는 것
으로 우리기업은 물론, 일본기업과 글
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
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”고 했다.

이어 “올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
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및 국제
통화기금(IMF) 연차총회, 한-아세안
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
돼 있다”며 “(이러한 국제회의는) 글로
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
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
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부연했다.

‘집권당’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
대·정부보다 큰 보복의 행보를 준비하
고 있다. 민주당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
를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 특별위원회
구성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. 다수의
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,
이번 특위는 청와대·정부 정책을 뒷받
침하기 위함이다. 특위의 본격적인 활
동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 오는 21
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 특위 위
원장은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인 것으

로 알려졌다.
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
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. 그뿐인
가. 최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“일
본의 보복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
라 사실상의 경제침략”이라며 당정책
차원의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.
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보다 큰 보복
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
때문이다.

한편 야권에서는 여권의 일본 수출
규제 대응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.
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최고위
원회의 때 “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
대책회의를 열고 재계·전문가들의 의
견을 청취했다”며 “예상대로 재계는 현
재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고, 전문가
들은 ‘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
큼,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서 해결해야
한다’는 의견들을 줬다”고 운을 뗐다.

이어 “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
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
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
해야 한다.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
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
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
말씀을 드린다”고 부연했다.

/우승준 기자 dn1114@



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대(對)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.

/연합뉴스

무디스, 韓 국가신용등급 ‘안정적’

경제·재정 매우 견고... Aa2 유지

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
의 국가신용등급을 ‘Aa2’로 유지하고
등급 전망은 ‘안정적’으로 평가했다.

무디스는 “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·
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
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”며
“한국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
기 부진에도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
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
고 경쟁력이 높다”고 등급 유지 배경을
밝혔다.

또 무디스는 “한국의 매우 강력한 제
도적 틀이 잠재적인 경제·금융 위험에

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며 건전한 재정이
경기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한다”며
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에 ‘매우 높
음’, 재정적 강점에는 ‘매우 높음+’, 리
스크 민감도는 ‘보통’ 점수를 매겼다.

다만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급속
한 고령화를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
요소로 꼽았다.

무디스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
에 대해 “전쟁 피해배상을 둘러싼 분쟁
으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에 있어
핵심적인 소재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
육취했다”며 “이에 따라 현재 경제성장률
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

/김희주 기자 hj89@